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0월 24일  
미래·복지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3년 10월 13일

나. 제 안 자: 최세진 의원 외 9명

다. 회부일자: 2023년 10월 16일

라. 상정일자: 제29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·의결(2023. 10. 24.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최세진 의원)

#### ☐ 제안이유

근거법인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고, 관내 충전시설 설치 촉진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#### ☐ 주요내용

가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함(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4조제2항제3호)

나.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을 근거법에 따라 규정함(안 제6조)

다.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함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, 제11조의2, 제11조의3

나. 예산조치: 필요 시 편성

다. 해당부서: 녹색환경과

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3. 10. 16. ~ 10. 20.) 결과: 의견 없음

#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개정취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한 것으로, 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촉진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이바지 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2조(정의) 및 제4조(보급시행계획 수립)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였음 [“충전시설”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]

○ 안 제6조(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)

- 제6조제1항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는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의2의 제1항<sup>1)</sup>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
- 제6조제2항은 법 제11조의2의 제6항<sup>2)</sup>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·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음
- 제6조제3항은 충전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이는 법 제11조의3의 제1항<sup>3)</sup> 규정을 반영하였고,

1)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2) 제11조의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3) 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- 제6조제4항은 법 제11조의3의 제2항<sup>4)</sup>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했으며,
  - 제6조제5항은 법 제11조의3의 제5항<sup>5)</sup>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절하다고 판단됨
- 안 제7조(운행에 대한 지원)에서는 법 제11조<sup>6)</sup>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(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)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,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음

- 
- 4) 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5) 제11조의3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
- 6) 제11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(標識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,
- 지속적인 전기차,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증가에 비해 이용자 관점에서는 충전 관련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충전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고자 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,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규정과 충전시설 보급·확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항, 충전시설에 대한 임대료 감경률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,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됨

## 【참고자료】

-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현황 (2023. 9. 30. 기준)

합계	전기자동차	하이브리드 자동차	수소자동차
16,184	3,426	12,505	253

- 강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(2023. 9. 30. 기준)

합계	전기자동차 충전소(급·완속)				수소충전소
	소계	공공시설	민간시설 (아파트 등 제외)	아파트 등 주택	
2,531	2,528	238	650	1,640	3

**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**

**6. 토론요지: 생략**

**7. 심사결과: 원안가결**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## 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(標識)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전문개정 2011. 5. 24.]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 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7. 27.>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7.>

③ 시·도지사는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7.>

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 7. 27.>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1. 7. 27.>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7.>

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8. 3. 20., 2021. 7. 27.>

1. 전기자동차

2.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

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21. 7. 27.>

1. 전기자동차

2. 하이브리드자동차

3. 수소전기자동차

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 3. 20., 2021. 7. 27.>

⑩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교통,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3. 20., 2021. 7. 27.>

⑪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·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, 개방하는 환경친



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7. 27.>

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 7. 27.>

[본조신설 2016. 1. 27.][제목개정 2021. 7. 27.]

**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**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7.>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7.>

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7.>

[본조신설 2018. 12. 31.]